광주시 "도시철도 첨단대교 구간 지하화 불가"

유일 지상구간…주민공청회 열어
주민들 안전 우려·교통난 등 제기
市, 정부 승인·공사 지연 등 난색
차선 확장 등 교통혼잡 개선 제시

지난 11일 광주 북구 첨단사회복지관에서서 열린 '첨단대교 지상화로 인한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혼잡 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공사 개요가 담긴 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유일한 지상 구간인 첨단대교 구간 지하화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차선 확장과 우회로 등 교통 혼잡 개선안을 마련해 주민 설득에 나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대교 지상화로 인한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혼잡 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지하화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문제지만 정부 승인도 어렵고 최소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가 제시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건설 방안에도 난색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과 교통량만 따지면 대책위의 제안이 매우 유리하지만 본선 도로 용량이 감소하고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철 시설물과도 겹치게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450억원에서 600억원이 필요한 제안"이라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첨단대교 하부에 굴다리를 설치하거나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공원 등을 철거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대신 광주시는 차선 확장 등 교통 혼잡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 4~5차로로 운영하던 차선을 5~6차로로 늘리면 도로 역량 대비 통행량 효과를 20% 늘릴 수 있고 대기행렬도 261m에서 193m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회로를 확보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행 전용로 신설,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화를 요구하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당초 지상화 구간이었던 광신대교가 지하화로 결정된 근거는 무엇이냐"며 "이미 노후한 첨단대교에 지상화로 하면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광신대교는 내진설계가 안 돼 도시철도가 지나가기엔 상당히 위험했다"며 "반면 첨단대교는 내진설계가 포함돼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도 "도시철도라곤 하지만 크기가 관광버스 정도로 15톤 트럭에 흙을 가득 싣고 가는 무게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며 "쇠바퀴가 아니라 고무바퀴여서 소음에 대한 우려도 적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지상화로 기존의 좌회전이 제한돼 출퇴근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출퇴근길 교통량 분석 등 전문기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선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 폭염 취약계층 건강·안전관리 강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쪽방촌 주민, 배달노동자, 건설노동자,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계층의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냉방용품, 응급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쪽빛상담소,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노숙인일시보호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긴급 잠자리, 냉방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1000여명이 매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 8000여가구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2시간 작업, 20분 휴식이' 권고되며, 냉방시설과 냉수·쿨링용품이 구비된다.

'안전쉼터 쿠폰 지급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 사업은 광주경제진흥일자리재단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며,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 야외 활동이 잦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쉼터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배달노동자 150명, 대리운전기사 500명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5000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을 지급한다.

정상아 기자

尹, 오늘 특검 출석도 불투명… 강제구인 가능성

특검 "방문 아닌 소환조사 원칙"
윤측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촉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이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